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보고순서

Ⅰ 추진배경

Ⅱ 비전과 추진전략

Ⅲ 부문별 정책과제

Ⅳ 향후 추진일정

Ⅰ 추진배경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. 왜 2단계 정책이 필요한가?

그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 중점

- 공공부문 주도의 국가기관 이전, 행복 · 혁신 · 기업도시 건설
- 인재 · 기술 · 산업이 결합된 내재적 지역혁신 역량 강화

➡ 비수도권 GRDP 및 수출 비중 증가 등 성과

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 지속

- 수도권 인구 비중[%]: (02)47.2 → (06)48.7
- 총사업체 수 비중[%] : (02)45.6 → (05)46.6

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

-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으로 획기적 지방발전 전기 마련
- 1단계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완성도 제고

2. 참여정부의 정책의지

-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
  ['02년 대선공약]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차등 부과 및 교육·보육분야의 획기적 재정지원 방안 검토

3. 추진경위

06. 9

- 균형위, 2단계 대책 마련 착수
  - 균형위 주최 전문가 회의 수차례 개최 (06.10~11)
  - 정책실장 주재 전문가 회의 (국토연구원장, 산업연구원장 등, 06.11.30)
  - 과제별 부처 실무협의 진행 (06.11~12)
  - 정책실장 주재 비서관 회의 (06.12. 8)

06. 12. 22

- 2단계 구상 시안 대통령 보고

07. 1월

- 주요기업 대상 의견 수렴

07. 1월

- 쟁점과제 대상 균형위-관계부처 협의 진행

07. 1. 25

- 정책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

07. 1. 26

- 대통령 주재 주요부처 장관회의 개최

07. 2. 7

-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 [안동]

Ⅱ 비전과 추진전략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. 정책비전

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

2단계 (민간부문)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1단계 (공공부문)

다핵형 국토공간 형성

- 행정중심복합도시
- 혁신도시·기업도시
- 공공기관 지방이전

지역혁신 역량 강화

- 지역혁신체계(RIS) 구축
- 지역 R&D 역량 강화
- 지역전략산업 육성

2. 추진전략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-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: 조세, 인력, 부지 문제 해결
-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: 주거 · 교육 · 의료 등 기반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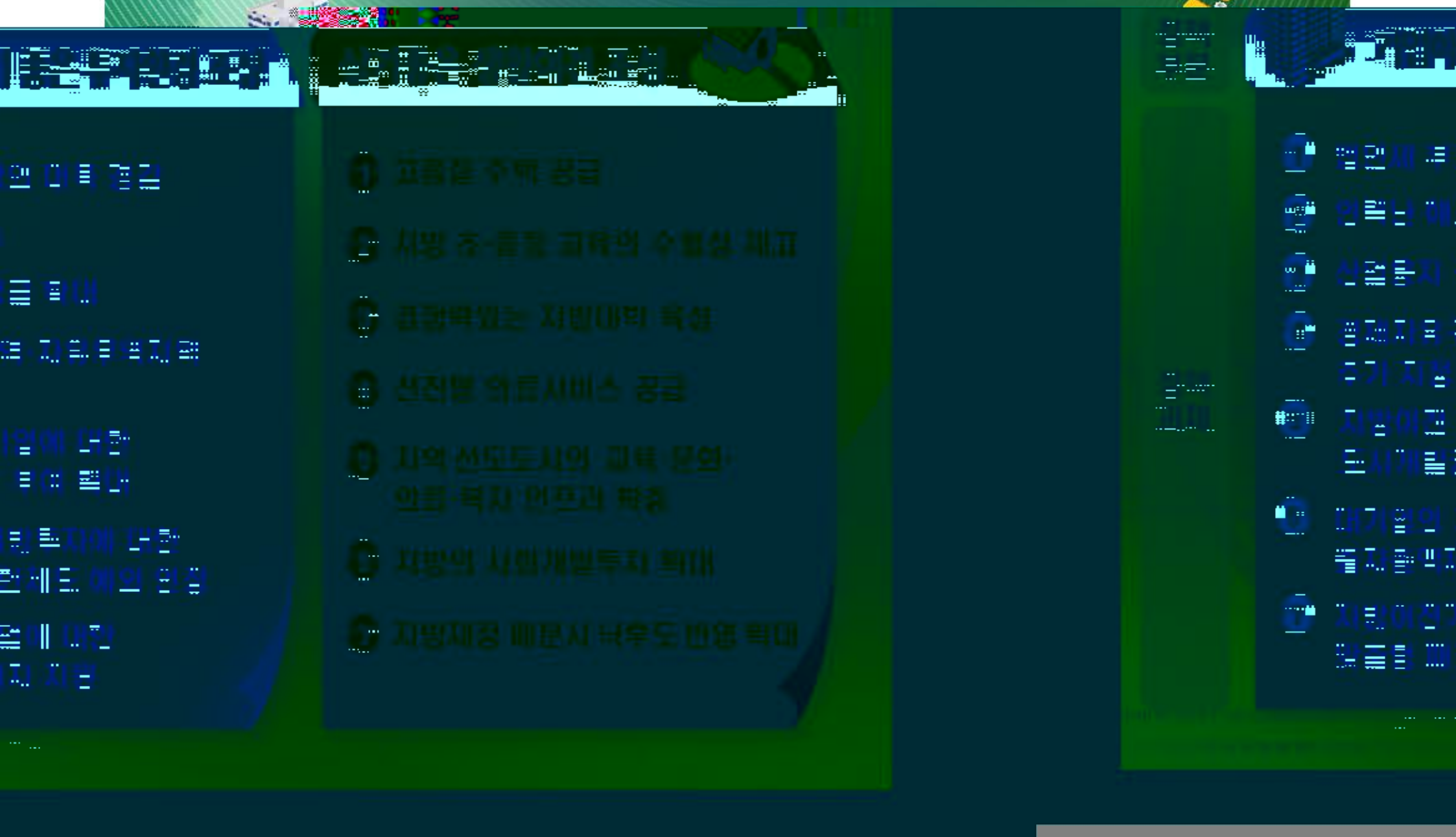
지역거점 중심으로 집중 지원

- 지방 대도시, 산업단지 클러스터, 중소도시 등 지역발전 거점 활용
- 기업환경 · 생활여건 등 종합 패키지 지원

지역별 인센티브 차등화

- 지역발전 정도, 투자환경 등을 감안 3그룹으로 분류
  - 분류(안) : 발전지역, 성장지역, 정체지역
- 지역분류, 고용효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

3. 추진과제 : 2대 부문 14개 과제



Ⅲ 부문별 정책과제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정책방향

- 지방 창업·이전·사업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인 세금·인력·부지문제 집중 해결

①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
- 지방 창업·이전, 기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 경감
  [1안]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(10~30년) 병행
  [2안] 감면 대상기업 확대 및 감면기간 대폭 연장
  ※ 정책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 경감방안을 최종 확정
- 지역발전 정도, 고용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
-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대폭 조정
  (현행 : 대기업 15%, 중소기업 : 10%)
- 외국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감 혜택 부여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② 인력난 해소

•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

- 기존 지방기업이 신규 투자로 일정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지급

※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 지급

•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

-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허용 : 현행 기준 + 20%
-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

•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

-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맞추어 계약형 학과 등 집중 지원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

• 저가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

- 산업단지 공급 애로지역에 집중 지원
  ※ 필요 시 농업진흥지역 등도 적극 활용
- 혁신/기업도시에 초장기 임대산업단지 공급
  (예) 평당 연간임대료 : 조성원가의 1% 미만, 임대기간 : 50년

•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

- 이전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부지 적기 공급 지원
  ※ 국무총리 소속의 「지방산업용지 애로타개위원회」(가칭)를 두어 토지이용 규제 일괄처리
-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인프라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④ 경제자유구역 ·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

-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으로 지방에 외자유치 확대
- 자유무역지역를 확대 지정하여 수출기업 및 지역경제 육성

※ 현행 세제 지원(경제자유구역 · 자유무역지역) : 법인세 3년 100% 그후 2년 50%

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
- 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 이전시 상업적 도시개발 허용

(예) 1,000명이상 고용기업에 100만평 규모 이내의 도시개발 허용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⑥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

- 본사와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정책방향

- 주거·교육·의료·복지부문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
- 배후 지역과 연계하여 거점도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① 고품질 주택 공급

- **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 제도 도입**
  - 거주기간, 청약예금 가입 등 자격요건 면제·완화
  -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허용 기간(현행 2년) 대폭 연장
- **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**
  - 지방이전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
- **지방이전 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**
  -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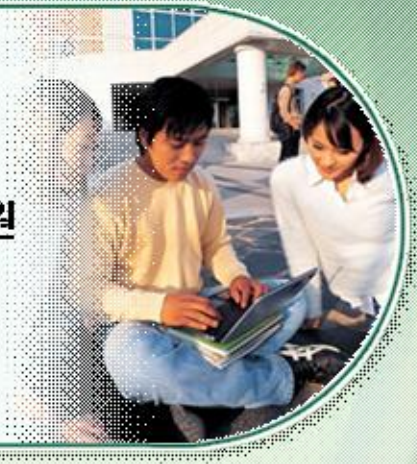
②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

- 지방의 초중학교를 '지역복지 거점학교'로 운영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- **지방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**
  - 이공계열 : 국가 장학금 지방 지원비율 확대(35%→60%)
  - 인문계열 : 지방대학에 이공계와 동일조건으로 학비 지원
    - 현행 선발기준(내신성적 상위 20%, 수능성적 2등급) 완화



- **지방대학에 현대적 기숙사 지원**
  - 신세대 취향에 맞게 독립형 주거공간이 확보되는 기숙사 확충
    - ※ 단체생활형 → 개인/가족형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④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
- 체계적인 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

지역보건소	지방의료원	지방국립대 병원
1차 진료 지역의료건강센터	2차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	3차 의료기관으로 특화 발전 유도

-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공급

주민건강정보 DB화 → 정기적 검진 (방문검진) → 응급의료 지원

⑤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 · 문화 · 복지 인프라 확충

- 혁신 · 기업 도시내 개방형 자율학교 우선 지정
- 문화 · 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 및 복지시설 확충 지원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⑥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

- **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**
  - 사회개발분야 비중을 40%수준으로 확대
  - ※ '07년 사회개발 지출 비중 : 36.2%

⑦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- **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배분기준 개선**
  - 재정력 지수, 노령화 등 낙후도 요소 반영 확대
- **매칭펀드 사업의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**
  - 차등화 대상사업 및 차등 폭을 대폭 확대
  -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

Ⅳ. 향후 추진일정

- 2단계 구상 발표

- 2단계 세부추진계획 마련 · 확정

- '08년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

- 법안 국회 제출

감사합니다
국가균형발전위원회